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I. 문제제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시작통권) 문제가 광풍을 일으키며 안보논란을 넘어 정치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자칫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이슈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이러한 논란은 보-혁 대결의 양상을 띠는 것보다는 진보세력의 침묵 속에 보수세력의 총공세를 전개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쟁기는 역대 국방장관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지난 8월2일 역대 국방장관 등 군 원로 15명이 전시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환수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뒤, 성우회 등 전역 군인단체와 예비역 장교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고, 대학교수·변호사 등 지식인들, 전직외교관들, 전직 경찰총수들의 성명이 뒤를 이었다.

이에 호응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자체를 차기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재향군인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1개 보수단체들은 “내년 대선에서 전시작통권 재협상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8년 대선이라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인사와 단체들이 전시작통권 문제를 순수한 안보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시작통권 문제에 관한 통합된 의견이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전시작통권 문제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진지한 전문가의 토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한국군의 단독행사와 한미군사협조본부(MCC)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전시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

냉전종식 이후 국가간의 전면전쟁 가능성이 약화되고 그 대신 테러, 국제범죄, 해적 등 신안보 요소들이 부각됨에 따라 한미양국은 종전의 냉전형 군사동맹관계를 재편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한국이 과거 후진국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민주혁명을 통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엄연한 민주국가로 탈바꿈함에 따라 한미동맹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미동맹을 냉전형 군사동맹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인권’을 중시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2005.11.17 “한미 공동선언”)으로 재정의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한미 군사관계도 종전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1. 한국의 입장: 국익에 기초한 다양한 위기관리 대응

그 동안 한국군 내부에서 한미 군사관계의 비대칭성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미군 주도의 의사결정과 운영, 미군의 작전계획에 입각한 군사력 운용 등으로 한국군의 입장 반영이 제한되어 있다. 사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모두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변국의 잠재위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가령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기 어렵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의 복잡한 지휘체계로 한국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3개의 지휘채널을 갖고 있다. 이중 연합사령관의 직책만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협조와 조정통제에 따르는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일 한미 양국간에 대북 혹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기 발생시 한미 양국이 국가이익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지휘권이 미군에게 있는 현 작전지휘체계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한반도 위기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위기 여부를 판단하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태세검토(NPR)>(2002)에서 ‘악의 축’ 국가인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힌 이래, 2006년 3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핵선제공격 독트린의 유지를 재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남북한에 비해 인적, 물적 희생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전쟁 결정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사실상 민족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2. 미국의 입장: 신속기동군화와 장기·안정적인 한국 주둔

한 때 국내에서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미국이 마지못해 따른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곧 미국의 군사변환과 새로운 세계전략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전시작통권 반환은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다. 미국은 9.11테러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변환에 따라 해외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있다. 금년 2월에 발표한 「4년주기 국방정책검토(QDR 2006)」에서 미 국방부는 지역별로 되어 있는 전구(戰區)체계를 전지구적 단일 전구체계로 전환해 세계 곳곳에 전개된 미군을 자유롭게 운용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전지구에 흩어져 있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적응성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북 억제력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국제분쟁에 개입하려 할 경우 ‘휘말림’을 우려하는 한국정부로 인해 한미연합사 체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통권을 가지고 한반도 전구작전사령관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한국 내 반미여론을 무마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따라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주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급적 한미간 마찰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광대한 공여지와 전시작통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동안 대책을 마련해 왔다.

먼저, 미국측은 2001년 1월에 제2차 개정을 마쳤고, 뒤이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수립해 미군기지 및 훈련장의 55% 이상을 반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용산기지를 포함해 주한미군 공여지 7,900여만 평 중 4,000여만 평을 한국정부에 반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군 내외에서 군사주권의 회복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미국이 전시작통권 반환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III. 전시작통권 환수와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

1. ‘국방개혁 2020’과 한국방위의 한국화

2005년 9월 12일 국방부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군 현대화, 그에 걸맞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작전기획 및 수행능력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국방개혁의 첫 단계로서 향후 5년간 한국군의 전력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 2020>에서는 한미연합방위 태세 속에서 한국 고유의 전략과 군사교리 발전, 작전 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3군을 각각 지상·해군·공군 작전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고 정보, 작전기획 및 수행, 합동전장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개혁의 내용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한국군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때에 국방비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국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통권 환수는 전력(戰力)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구조상 통제체계의 변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국방비가 들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2020>에서 15년간 621조의 국방비가 든다고 밝힌 점을 환수 비용인 것처럼 둔갑시켜, 향후 14년 동안 연간 1인당 9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사실왜곡 사례이다. 인건비, 복지비를 포함한 국방비 총액을 환수비용인 것처럼 왜곡한 것도 그렇지만, 물가상승률이나 GDP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국방비 부담을 과장한 것도 커다란 문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미 전시작통권 환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은 일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가 투입기로 계획했던 군사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의 지휘구조상 통제(독자사령부)체계만을 변경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방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금년 8월 29일 국방부도 '전시작통권 환수와 국방예산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문을 내어, 전시작통권 환수 때문에 추가적인 국방비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621조원은 향후 15년간 소요되는 국방비의 총액으로 자주국방의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에 이미 국방건설 예산으로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의 특징은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국방비가 과연 얼마나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1인당 부담액이 얼마라는지 하면서 국민들을 정치적 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적정국방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국방비의 총액이 아니라 GNP대비 국방비의 비중이 몇 %이고, 국방비 증가율이 정부예산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로 삼아야 한다.

<표>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및 비율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재정증가율	11.8	10.5	7.8	1.7	11.8	
국방비증가율	6.3	6.3	7.0	8.1	9.9	
국방비 비율	GDP대비	2.8	2.8	2.7	2.8	2.85
	재정대비	15.5	14.9	14.8	15.8	15.5

<출전>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87쪽.

<국방개혁 2020>을 살펴보면, 국방예산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9.9%, 그 다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 8.8%, 그리고 2016~2020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이 계획은 물가상승률 2.3%를 적용해 7.4%(초기)~6.7%(후기)의 경제성장률(경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성장률로만 본다면, 경제성장률을 5.1%~4.6%로 잡은 것이다. 이럴 경우, 국방예산은 2005년 GDP의 2.85%에서 2015년에는 약 3.2%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다시 2.4%로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Bruce Bennett, A Brief Analysis of the ROK Defense Reform Plan, 2005.11.)

영국 IISS에서 발간한 <Military Balance 2003~04>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자. GDP대비 국방비는 미국이 3.3%, 중국이 4.1%, 일본이 1%, 러시아가 4.8%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2.4%, 2.5%, 1.5%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대만은 2.7%로 예상보다 낮았지만, 적대적 안보환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9.7%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볼 때, 전시작통권 환수와는 별도로 국방개혁에 따른 국방비 증가가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동안 국방전문가들이 요구해 왔던 GDP대비 국방비 3.5%라는 ‘꿈’과는 거리가 먼 수치인 것이다.

2. 한미 군사협조본부(MCC)의 창설배경

1978년부터 20여 년간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CFC)체제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왔다.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비록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되어 있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평시 연합위임사항(CODA) 6개항을 포함해 ‘데프콘3’이상의 전시상황에서 전시작통권을 공동행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추진되면서 혹시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전시작

통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로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등 굳건한 50년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이 주일미군과 사령부를 통합하는 등 연합시스템으로 가는 반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CFC)가 해체되면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고 동맹이 약화, 해체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군사협조본부의 창설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연합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때 연합사는 없었다. 한미연합사는 특정상황에서 만들어진 한미공동방위체제의 한 형태일 뿐이다. 실제로 1953~78년의 25년 동안에 연합사가 없었어도 한미동맹은 잘 운영되었다. 한미연합사의 창설은 당시 국제정세 및 한반도 정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73년에 한국과 유엔을 연결시켜 주던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해체되자 북한은 유엔사 해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및 유엔 깃발하의 주한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의(Resolution 3330-B)가 통과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1977년에 취임한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작전통제권 문제도 해결하고 미군철수도 막으려는 의도에서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 양국은 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유엔사령부를 존속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외주둔군재배치(GPR)계획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을 불박이군이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도 그러한 변화의 일환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전시작통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CFC)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하는 것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도록 작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맞춰 변화해 가는 동맹의 성격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한미동맹은 종전의 냉전형 군사동맹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원리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양국의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 작년 11월17일 한미 공동선언에서 밝힌 “포괄적이고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재정의이다.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군사협조본부의 창설은 바로 냉전형 동맹관계를 탈냉전형 동맹관계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상황이 바뀌어 연합사가 ‘한미군사협조본부’(MCC)로 바뀐다고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사협조본부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한국군과 미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발전된 형태인 것이다.

3. 군사협조본부와 한·미 군사협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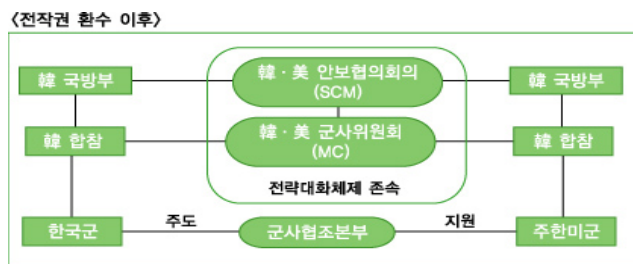
지난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향후 한미 군사협력의 방향을 “한국방위의 한국화, 주한 미군의 지원적 역할”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한미 군사협력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 양국은 양국군 간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군사협조본부(MCC)'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동맹군사 구조하에서 양국은 SCM과 MC와 같은 전략대화 체제는 계속 존속시킨다. MCC는 현재 한미연합사가 한미간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총괄 기구인 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로부터 전략지시를 받는 것처럼 SCM과 MC의 통제를 받게 된다.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의 기능 가운데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과 군사위원회(MC)의 통제를 받는다. 이곳에서는 전쟁억제와 대비태세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해 군사협조본부 아래 평시부터 10여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두게 된다. 이 기구는 △계획작성, △정보공유, △위기관리, △연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기타 전투전술발전, △해외 군사협력, △군수지원, △지휘통제(C4I)체계 등에 대해서도 협조하게 될 것이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산하의 각 구성군 체제를 대신하여, 미국은 한국군의 육·해·공군 등 각 군사령부에 주한미군의 해당 사령부 '작전협조반'이 파견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작전사령부 간에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측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를 만든다. 각 작전사 협조반은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협조하며, 작전수행간 협조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등 작전사간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군의 경우는 공군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모 및 협조 면에서 보다 강화된 한미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

한미 양국이 자국군에 대해 전·평시 작통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던 한반도 작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한국 합참이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지원역할은 정보·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등 첨단전력의 지원이 될 것이다.



4. 군사협조본부 체제하의 미군의 전시증원

주한미군이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에게 반환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유사시 전시증원군을 보내줄 것인지가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시증원군을 제때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맺고 있는 안보조약 가운데 ‘자동개입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북대서양조약’이 유일하다. ‘미-일안보조약’이나 ‘ANZUS조약’, ‘미-필리핀 안보조약’ 등에서 자동개입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일본이 침공받았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세계 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점에서 역시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고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3만 명 가까이 주둔해 있고, 10만 5천명(2006년 4월말 현재)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국내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증원군을 파견할 것이 분명하다. 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조항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이라는 국내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및 증원군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법에서는 미국의 군사개입 조건으로 △미 의회의 선전포고, △성문화된 특별권한, △자위권 발동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굳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따른 군사개입이나 미국민의 피격에 따른 ‘자위권 발동’에 따른 군사개입이 아니더라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에서는 유사시 미군의 전시증원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는 미8군 산하에 전시증원군의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제19지원사령부(대구 소재)가 있어 3단계의 전시증원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편이 추진되면서, 이미 2005년 6월에 제2사단은 미래형사단 2UEx로, 제2사단 1여단은 제1중무장 여단전투팀(1UA)으로 미군에서 가장 먼저 개편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올 여름에는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501증원지원여단(the 501st Sustainment Brigade)이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부대 접수와 배치, 전방이동, 통합 등 한반도 안팎으로 전개되는 부대를 지원

하여 30일 이내에 군급(軍級) 사령부를 신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전시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시증원을 위한 것이 이 부대의 기본임무인 것이다.

전시작통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아마도 '연합작계 5027'에 따른 3단계 미군 전시증원계획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은 미 군사 변환과 전시작통권 환수에 따라 현실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쟁발발 직전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FDO)이나 전쟁발발 초기에 한반도에 긴급히 배치될 '전투력증강'(FMP)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이 유사시 미군이 '압도적 군사력'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에 합의해 놓고, 구체적인 증원군의 규모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IV. 맺음말: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를 대비하자

작년 10월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이래, 전시작통권 환수로드맵을 둘러싼 논의는 금년 3월 한미 합동실무반에서 '한미관련약정(TOR)'을 체결하여 기본방향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협의가 끝나고 오는 10월 제38차 한미SCM에서의 발표만 남은 상태여서 환수입장을 거둬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29일 체니 미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전 휴전협정 체결 5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약속, 평화와 안보 등 친구에 대한 약속은 깰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9월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조정 및 재배치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군사지휘체계 전환 로드맵을 작성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아울러 전시작통권 환수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며,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이렇듯 전시작통권 환수 결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시작통권 로드맵을 예정대로 오는 10월 SCM에서 확정해야 한다. 환수로드맵에 따라 전시작통권 환수를 착실하게 추진하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관계 및 주변국관계,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착실하게 국방력을 정비하고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북한이 오관할 소지를 막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재정립하여 잠재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이슈화해서는 안 된다. 환수 이후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